SUMMARY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2025.06.04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유) 율촌

분야별 주요 공약

Ⅰ. 통상

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②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③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④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Ⅱ. 기업환경과 노동

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상법 개정)
②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회복
③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글로벌 기술력 강화
④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온라인플랫폼법)
⑤ 교섭권 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노란봉투법)
⑥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⑦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⑧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⑨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Ⅲ. 금융·금융규제

① 디지털자산 허브 육성
②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③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④ 포용금융 확대로 금융취약계층 지원
⑤ 선량한 채무자 금융보호 강화
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

Ⅳ. 반도체·AI

①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③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국민펀드)
④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⑤ 모두의 AI 프로젝트 및 규제 특례
⑥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Ⅴ. 헬스케어·건강보험

① 제약 산업 규제 개선 및 약가 보상체계 개편
②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③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급여대상 확대

Ⅵ. 부동산·국가균형발전

① 공공임대비율 단계적 확대
② 국가균형발전

Ⅶ. 방위산업

①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②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③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Ⅷ. 환경·에너지

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②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③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④ 햇빛·바람 연금 확대

Ⅸ. 통신·게임 산업

①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및 국가 핵심인프라 보안 강화
② 균형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X. 법조 개혁

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② 변호사 공공성 강화 (▲국선 확대 ▲변호사 징계권 개편)
③ 판결문 공개 (국민 사법참여 확대)
④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⑤ 검찰 개혁 및 대법관 정원 확대

분석 및 시사점

통 상

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한미 통상협상 관련, 新정부 출범으로 협상 속도, 접근 방법, 대상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결론이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근본적으로 전 정부는 기업 우선주의와 전체 국가적 부 창출 차원에서 비관세장벽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 정부는 통상 협상에 있어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의 의제는 별도 협상 Table로 분리하려는 입장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즉, 새 정부는 비관세장벽의 경우, 국내 특수사정, 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자생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관점이 강하고, 통상 협상테이블과 분리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 자체가 파편화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결국 메타, 구글 등 거대 Platform IT 기업들의 요구사항은 상당 부분 수용하되, 방위비 분담과 비관세장벽 철폐는 수성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 자체도 불확실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통상협상에 대한 속도조절은 정책적으로 우월한 전략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新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도 EU 및 유럽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국내 방산업계에 BD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EU집행위원회의 핵심산업 육성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친환경·디지털 분야에 있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2024년 2월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방산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③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민주당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상이하여 향후 촉진세제 도입 시 어느 것이 채택될지 주시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④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기존 통상 정책 및 추진계획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에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확대, 정책금융·무역보험 등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환경 · 노동

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상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보다 강화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대적 M&A, 상법상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인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내부거래의 명목을 컨설팅 등으로 변경한 편법적 거래 등에 대해 촘촘한 규제 프레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회복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역외 외환시장을 개설하고 시장 개방도를 확대해야 하며, 공매도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자유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져 수출 중심 기업들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해외 기관투자자發 주가 급락 및 시세조종 위험,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입 가능성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 또한 우려됩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해결과 적대적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방어수단 마련 등 기업 경영 선진화와 안정성 제고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편입된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경우 한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기존에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던 펀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③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중심의 세제 개편 정책은 선거운동 당시 모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해 파격적인 세재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국가 채무와, 정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정책 기조의 변화로 풀이되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 투자 세제 지원 등의 핀셋식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온라인플랫폼법)

✓ 공정경제와 소상공인 보호가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기조인 만큼,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대로 본 법안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수의 미국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으로 입법을 보류하고,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교섭권 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 (노란봉투법)

노동 이슈 관련, 여야의 정책 방향은 큰 차이점이 없으나, 현안 문제 해결에 노동 이슈 비중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나, 여당은 노동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하면서 정책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새 정부는 한노총과 정책연대 등 노동계와의 연합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법론에 있어 노동계를 배려하는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이 대선과정에서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공약에도 명문화 한 바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초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위축과 내수 부진 등 기업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학계, 노동계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프레임 논쟁이 부담될 경우 노란봉투법 추진방식(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 입법 시기, 노동조합법 내 다른 조항과의 병행 입법 등을 통한 갈등 최소화도 예상됩니다.

⑥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대법원은 급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묵시적 합의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 등 유효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도가 균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을 우선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포괄임금제 금지 효과를 얻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임금분포제)

✓ 임금분포제는 직급, 근속연수, 직무 등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업의 협조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업 전반의 정확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⑧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단계적·부분적 도입하여 우선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도입 또한 업종별, 직능별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에 대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거나 AI 또는 로봇 등을 도입하여 근로 시간 감소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 정년 연장은 세대간, 기업-근로자간 이해관계가 달라 한번에 상향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해외 주요 국가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였습니다.

✓ 이재명 정부도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형태, 청년과의 일자리 분리, 연금수령 연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매우 장기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 금융규제

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개정을 통한'연내도입' 목표를 제시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입법 및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입법·금융·핀테크·컴플라이언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부터 규정 정비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상권경제 활성화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서민피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금융사고 책임자 징벌적 처벌 등 금융범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 이재명 대통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특히 대환대출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만큼 대환대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포용금융 확대로 금융취약계층 지원

✓ 중금리 대출을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의 핵심인 ▲재원 조달 방법 ▲전문은행 운영 주체(정부 vs. 민간) ▲정부의 관여 정도 ▲세부 운영방안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금융취약계층 지원 공약은 모두 궁극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슈로, 통상 정부는 가급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 공동출연 등을 통해 추진 재원을 마련해왔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출연 요구 등 재원 형성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⑤ 선량한 채무자 금융보호 강화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 설립의 경우, MB 정부 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민금융 전문은행 "미소금융"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강조해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며, 민간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대규모 펀드 설치, 소득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 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 등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

✓ 금융감독기능 강화 배경으로는 금융산업이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기조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금융사고 시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자발적 위험 감수 측면도 강조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의 국제 금융정책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안)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2원화 ▲(2안) 시장건전성 관리와 시장감독원 2원화 체제 ▲(3안)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 겸임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의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 감독기능 개편안 중 1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2안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해 보이나, 건전성과 시장감독원의 분리가 조직의 반발과 그 기능의 분석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직개편의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안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부여되고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신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선거 다음 날 취임하기 때문에, 당장 소관부처에 손을 대기 힘들고, 특히 경제부총리가 부재하여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취임 후 최소 2개월 이상은 지나야 조직개편 밑그림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 AI

①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 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 반도체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 지원, 인허가 특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한꺼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종 지원 요건, 규제 적용 범위, 준수 의무, 인센티브 관련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국민펀드)

✓ 100조 원 규모의 국민·기업 참여 국부펀드는 정부, 민간,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복합적 투자 구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법, 공정거래법, 연기금 운용규정 등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펀드 조성·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방지, 정보공시, 내부통제, 감독체계 등 금융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결합, 국외이전,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 등에서 법률적 리스크와 분쟁에 대한 수요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부지 확보,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복합적인 행정·환경법 이슈 등을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모두의 AI 프로젝트 및 규제 특례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규제: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데이터 관련 규제 해석과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AI 융복합 산업에서 산업별 인허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신기술 실증 등에서 행정법·산업법적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⑥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 공약집에는 '국내' 민간 클라우드를 명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localization 규제가 해소된다면, MS, AWS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도 국내 시장 확장을 위해 공공분야 진입을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약 · 건강보험

① 제약 산업 규제 개선 및 약가 보상체계 개편

✓ R&D 투자,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등의 정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약 개발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급여대상 확대

✓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에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완화와, 간병비·난임치료 등 급여 확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난임 부부 치료 지원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 지역균형발전

① 공공임대비율 단계적 확대

✓ 대통령 공약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세금 관련해서 정책 유지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으며, 재개발·재건축과 교통·인프라 공급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대부분 중장기 과제에 해당하여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 금리 인하 시점,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의 변수들이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가균형발전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초반부터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강조하였으며,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5극3특'전략, 자치분권 강화 등의 과제는 기업이 주목할만 합니다.

방위 산업

①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경선 당시부터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대선 10대 공약에도 정책 1순위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K방산 육성을 포함하며, 비중 있게 다루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방산) 및 R&D 지원과 같은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②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 공약은 다수의 사례에서 노출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여당이 방사청 예산안 중 R&D와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 등에서 약 2,251억 원을 삭감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이행 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신속시범획득사업(MTA)과 수출입은행법, 방위사업계약법 등과 같은 수출기업의 영업 행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재·개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 · 에너지

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원전의 활용

✓ 이재명 대통령은 발전산업의 무게중심을 원자력 보다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당이 최근 친 원자력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20대 대선 공약과 달리 에너지·환경 분야의 공약이 후순위로 밀린 점(4순위→10순위)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정책이 단기간내 확정·발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②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 지난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에 대한 개정이 2026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간 목표를 수반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 또한 상반기에 예고된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출권 거래제의 정상화 및 거래 활성화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에너지 공약 중 핵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은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다수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의 법적·행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④ 햇빛·바람 연금 확대

✓ 햇빛·바람 연금은 전남 신안군의 이익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및 한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외에도 에너지 환경 분야의 공약 중 지역경제를 발전하고자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재원 마련, 구축 시기,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신 · 게임 산업

①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및 국가 핵심인프라 보안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알뜰폰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자급제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고, 제4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모두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② 균형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 신 정부·여당은 K-콘텐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본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등 산업 육성 관점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관점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 개혁

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교한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법에 다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소송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제조회사 기업의 정보공유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내부 정보 공개, 반복적인 소송 악용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현재보다 현격하게 오픈된 수준으로 정보 공개를 강요당할 수 있어, 그 부담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큰 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② 변호사 공공성 강화(▲국선 확대 ▲변호사 징계권 개편)

✓ 국선변호사 확대와 변호사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사법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변호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징계권을 별도 독립 위원회에 부여하는 정책은 현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마찰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판결문 공개(국민 사법참여 확대) · ④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 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라 리걸테크 서비스가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건 판결 예측, 유사 판례 분석, 맞춤형 법률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가 가능하여, 기존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의 마찰이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검찰 개혁 및 대법관 정원 확대

✓ 대법관 증원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신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은 향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 여부, 내란세력 청산 속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 속도와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수사권 조정)처럼 실제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임기 초반 내란세력 청산목적으로 취임 직후 대폭적인 수뇌부 교체를 단행 후, 기존 조직을 유지 및 활용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법 개혁 공약은 의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는 활발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립 또는 국회 여야사법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논의과정을 지속함으로써 곧바로 추진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대선 이후 시점으로 잠시 미뤄져 있으나,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원 상고사건은 현재의 전원합의체 방식이 아닌, 소부 중심의 전담분야별 재판부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NTACT

손도일	변호사	IP& Technology 융합	02-528-5836	dison@yulchon.com
염용표	변호사	송무	02-528-5224	ypyeom@yulchon.com
신영수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514	ysshin@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공정거래	02-528-5179	jkyun@yulchon.com
이재근	변호사	송무	02-528-5596	jaklee@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노동	02-528-5355	swcho@yulchon.com
박재현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636	jpark@yulchon.com
오정한	변호사	송무	02-528-5742	jhoh@yulchon.com
전영준	변호사	조세	02-528-5661	yjchun@yulchon.com
김남호	변호사	부동산건설	02-528-5465	nhkim@yulchon.com
김근재	변호사	조세	02-528-5572	kjkim@yulchon.com
김기영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222	kykim@yulchon.com
김태건	변호사	부동산건설	02-528-5506	tkkim@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공정거래	02-528-5633	shhan@yulchon.com
이종혁	변호사	조세	02-528-5657	jonghlee@yulchon.com
최진수	변호사	송무	02-528-5141	jschoi@yulchon.com
임형주	변호사	IP& Technology 융합	02-528-5274	hjlim@yulchon.com
이수정	외국변호사	노동	02-528-5246	slee@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조세	02-528-5824	dongsukkim@yulchon.com
김한규	전문위원	조세	02-528-6124	hgkim@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